

‘빅3’ 무역전쟁은 곧 대공황? 韓 ‘나쁜 샌드위치’ 우려

(美·中·EU)

비온드 스톰

❶ 1930년 대공황 재연되나

“울음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있다… 비옥한 땅, 곳에 자리는 나무들, 튼튼한 줄기, 다 익은 열매. 하지만 페라 그리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그냥 죽어 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버려진 오렌지를 주우려고 덜컹거리는 자동차를 몰고 오지만 오렌지에는 이미 휘발유가 뿐져 있다. 신처럼 쌓인 오렌지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 속에는 패배감이 담겨 있다. 그리고 점점 커가는 분노가 있다. 분노의 포도가 사람들 혼을 가득 채우며 점점 익어간다.”

읽고 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책이 있다. 존 스티인벡(John Ernst Steinbeck)의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 1930년대의 ‘대공황’,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다.

세계경제에 ‘대공황’을 우려케 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족발시킨 무역 공방전이 다른 국가의 위협을 넣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발표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폭탄에 대항해 미국산 수입액의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트럼프

美 수출 10% ↓… 韓경제 먹구름 경제·기업의 불확실성 확대되며 리스크 초래… “구조 개혁 시급”

대통령은 곧바로 유럽산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맞불을 놓았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사실상 독일을 겨냥한 공격이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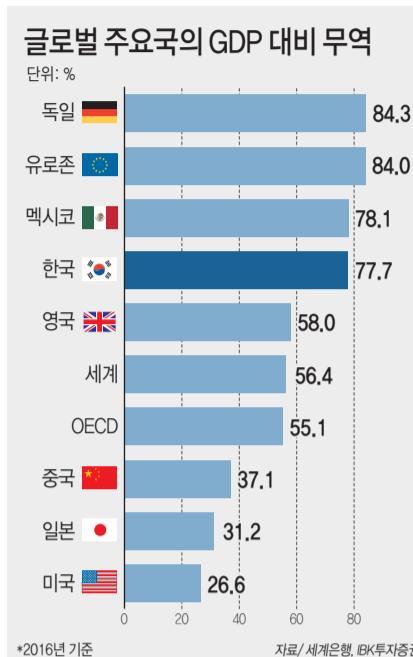
무역전쟁은 ‘스몰 오픈 이코노미’(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에 ‘페페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과 같은 존재다.

◆ 대공황 ‘블랙스완’은 올까

대공황을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

제프리 색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CNN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함으로 인해 일부 미국 철강업체들이 단기적으로 약간의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미국과 세계 경제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것”며 “우리는 과거에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1930년대 초반에 벌어진 세계 무역 전쟁으로 경제공황이 족발됐고 침체의 기간이 길어졌다”고 경고한다.

실제 1930년, 상무장관 출신인 하버트 후버 대통령은 그 해 6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대폭 올리는 ‘스무트-홀리법’에 서명했다. 미국 조치에 불만을 품은 교역 상대국들은 보복에 나섰고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1929년 1월에서 1933년 2월 사이 세계 교역량은 70% 가량이나 급



감하고 말았다.

미국 의도와는 정반대로 1929년 5%에 불과했던 비농업부문 실업률이 1933년 35%까지 급등했다. 1929년 뉴욕증시 폭락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잘못된 대응책은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와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때와 닮아 있다는 시각도 있다.

1930년대 보다 더 않좋다는 시각도 있다. 이른바 ‘장기적 침체국면’(Secular Stagnation)에 빠져 있다는 것. 장기정책란 경기침체와 소득불평등 심화로 세계경제가 만성적 수요부진에 빠진 상태를 뜻한

다. 모리스 옵스펠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카운슬러는 다보스 포럼 브리핑을 통해 “다음 경기침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가까이 와 있을 수 있다”며 “10년 전에 비해 대적할 무기들도 이제는 더 제한적인 실정이다”고 경고했다.

◆ 韓경제, ‘나쁜 샌드위치’ 신세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일이 일어날까. 많은 전문가들은 “글쎄, 지켜보자…”라는 답변이다.

걱정은 이 모든 사건이 하필 한국을 둘러싼 주변 이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오랜 세월 구축된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간 동맹과 상호호혜적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 대통령의 변덕으로 상처입었다”면서 “제대로 대응해 이를 구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이들 국가 경제에 치명적이란 얘기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보호무역의 리스크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기아차 등 미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5개 수출업체의 매도를 권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나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샌드위치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중국의 맹주격과 일본의 고급 기술 격차 사이에 낀 우리나라를 빗대 한 말이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일본 엔고(환율)와 거대 소비 시장인 중국 덕에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착한 샌드위치에 있었다. 삼성전자는 소니 등 일본 전자업체들의 몰락과 반도

체 슈퍼사이클로 세계 1위로 우뚝섰다. 현대자동차는 원화값 약세, 도요타 리콜 사태 등을 업고 시장점유율을 늘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은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경제 ‘빅3’ 간 무역전쟁, 아베노믹스의 ‘위험한 도박’ 등에 낀 나쁜 샌드위치가 됐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함께 묶여 미국의 통상압박에 더욱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한미FTA 개정 압박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 늘었지만 유독 미국 시장 수출만 10% 가량 감소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 초반으로,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부문에서 뒤떨어지는 생산성, 노동과 생산시장 왜곡과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사회보장제도 확대, 생산성 향상과 노동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수석연구위원과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반세계화 시대의 세계화’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활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활동에 새로운 형태의 규제와 리스크(위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효성 오너 부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공정위, 檢 고발여부 28일 최종결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 사무처가 법인뿐 아니라 조례·명예회장, 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 오너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상정한 만큼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사건 최초 신고 후 결론까지 22개월이 소요되면서 ‘늑장 처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작년 11월 사무처가 상정한 효성 관련 사건을 심의 결론을 내린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과 효성 투자개발 등 법인 2명,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사건 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 고발 조치하자는 내용을 담긴 심사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에는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공정거래법 23조 2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게 했고, 조 회장뿐만 아니라 당시

효성 회장이었던 조 명예회장까지 이어한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사무처의 의견과 효성 측의 반박을 들은 뒤 최종 제재안을 이날 결정하게 된다.

전원회의를 통해 공정위가 조 명예회장을 고발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첫 동일인(총수) 고발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 검사)는 지난 1월 23일 조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예컨대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검찰 기소 전에 결론을 내리고 조 회장을 고발했다면 사건이 병합돼 기소단계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효성 측이 피심인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1월에 전원회의 구성원인 상임위원에 대한 큰 폭의 인사가 이어졌기에 통상보다 한 달가량 심결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연령제한 폐지에도 공공부문 30대 신규취업 ↓

30대 비중 23%서 19.4%로 줄어

2015년부터 인원수·비율 감소세

정부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에 연령 제한을 폐지했지만 30대 구직자가 신규 취업하는 사례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중앙 정부·지방 정부·공공비영리단체·사회보장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신규 채용된 30대 구직자는 2015년보다 2016년에 인원수와 비율 모두 감소했다.

이들 공공부문에 새로 채용된 30대 취업 준비생 규모는 2014년 12월~2015년 12월에는 7만3000명이었지만 2015년 12월~2016년 12월에는 6만3000명으로 1만 명(13.8%) 감소했다.

이 기간 공공부문 전체 신규취업자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2.9%에서 19.4%로 축소했다.

40대와 50대 구직자 역시 공공부문 신규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공무원 학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모습.

/뉴스1

일자리를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 40대 신규취업자 수는 5만 6000명에서 4만 4000명으로 13.2% 줄었고, 50대 신규취업자는 3만 6000명에서 3만 3000명으로 6.8% 감소했다.

이들이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를 차지하는 비율은 15.8%에서 13.5%, 11.2%에서 10.2%로 각각 줄었다. 대신 29세 이하 취업 준비생이나 60세 이상 구직자의 공

공부문 신규 취업이 눈에 띄게 늘었다.

공공부문의 29세 이하 신규취업자는 11만 6000명에서 13만 3000명으로 15.0% 늘었고, 60세 이상 신규취업자는 4만 4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18.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연령대가 전체 신규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에서 40.9%로 13.8%에서 16.0%로 각각 증가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생보사, 자본확충으로 ‘새 회계제도’ 대비

생명보험사들이 자본확충을 통해 새 회계제도에 대비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해외에서 10억 달러(약 1조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과 신자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자본확충에 나선 것.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으로,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인정돼 자본을 늘리고 지급여력비율(RBC)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국내에서 5000억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최근 대주주인 현대 커머셜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현대라이프 관계자는 “유상증자까지 끝나면 RBC 비율이 안정권 수준에 도달해 당분간 RBC 비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이봉준 기자 b36sea@